



화약고로 떠오른 대만해협

관련 기사 6~7면

윤석열의
강경우파 본색
물타기

신지에 영입 12면
노동이사제
공약 등 11면

청주 보안법 구속자들
변호사 인터뷰

“F-35 도입 반대는 표현의 자유,
주장만으로 처벌하는 건
전체주의적 발상” 3면

미국
우파의
낙태 전쟁과
그에 맞선 운동
8~9면

한국에서
청소년 트랜스젠더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2면

노동조합 투쟁

CJ대한통운노조,
사측의 약속 배신에 반발 5면
군산의료원 파업 4면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노조 승소 11면

플랫폼 기업
규제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 4면

칠레 대선
좌파 승리,
이제 얼마나
바뀔까? 2면

《벼랑 끝 홀로 선 그들: 2021년 청소년 트랜스젠더 보고서》 발간 청소년 트랜스젠더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성지현

〈서울신문〉의 기자 네 명이 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벼랑 끝 홀로 선 그들: 2021 청소년 트랜스젠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청소년(15~24세) 트랜스젠더 22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8명의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청소년 트랜스젠더에 대한 양적조사는 국내 언론 최초라고 한다.[인터랙티브 기사(보고서 전문): <http://tiny.cc/transyouth>]

청소년기는 트랜스젠더에게 특히 힘든 시기이다. 2차 성징이라는 급격한 신체 변화를 겪고, 가족과 학교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

많은 청소년 트랜스젠더들이 자의 반 타의 반 학교를 포기한다. 성전환 수술 비용을 마련하려고 일찌감치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드는 경우도 많다. 하루라도 빨리 법적 성별을 변경(정정)하는 것이 그나마 나은 삶을 사는 데 필수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공부, 진학, 꿈은 유예되곤 한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겪는 이런 차별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

보고서를 보면, 청소년 트랜스젠더 5명 중 1명꼴로 학업을 중단한다. 지난해 중고등학교 학생의 학업 중단율이 평균 0.8퍼센트인 것과 견주면 27배나 높은 것이다.

이유는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청소년 트랜스젠더



3월 8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멈출 것을 호소하는 성소수자 부모모임 기자회견

68.8퍼센트가 중고등학교 재학 중에 교사에게 성소수자 비하 발언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24.1퍼센트는 직접적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답했다.

심층 인터뷰에 응한 트랜스 남성 회원 씨는 귀어문화축제 깃발을 동아리 친구가 찍어간 후 학교에서 괴롭힘이 심해졌다고 말했다. 도움을 요청하자 교사는 “네가 먼저 불편한 행동을 했으니 어쩔 수 없다”며 오히려 따돌림을 두둔했다고 한다. 그는 결국 자퇴를 선택했다.

가족은 종종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 청소년에게 넘기 어려운 장애물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트랜스젠더 절반 이상이 부모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지 못했다(어머니는 54퍼센트, 아버지는 65.6퍼센트가 자신의 정체성을 모른다고 답했다).

가족에게 정체성을 알리거나 들었을 때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가정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보고서는 15~18세 트랜스젠더 62.1퍼센트, 19~24세 트랜스젠더 75.9퍼센트가 가출을 고려했다고 답

한다. 탈가정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지”였다. 알다시피 이 사회에서 부모의 지원이 없이 청소년들이 생계를 이어가기란 정말 어렵다.

‘어릴 때 겪는 혼란’ 취급 받는 청소년 트랜스젠더

보고서는 청소년들의 의료적 트랜지션(성전환)과 법적 성별 정정 과정에 대해서도 다룬다(“진단서 정정까지”). 여기에서 청소년들이 겪는 특수한 어려움이 있다.

사회가 청소년 트랜스젠더의 정체성에 대해 흔히 ‘어릴 때 겪는 혼란’으로 치부하며 그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트랜스젠더가 이미 아동기 때 자신의 정체성에 눈뜬다.

자신이 트랜스젠더라는 걸 공식 인정받으려면 우선 정신과에서 ‘성주체성 장애 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의사들이 “어려서 더 지켜보자” 하며 진단을 잘 내주지 않는다고 한다. 2차 성징이 시작되는 청소년 트랜스젠더에게 이것은 말 그대로 절망일 수 있다. 보고서에는 여러 사례가 나온다.

“그날[어리다고 진단서를 안 내준 날] 로비에서 평평 울었어요. 안 받으면 이 몸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박영, 트랜스 남성, 18세 가명)

진단서 발급은 이들이 넘어야 할 난관의 시작에 불과하다. 성별 불일치감을 해소하려면 호르몬 치료와 외과적 수술도 필요한데, 여기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난한 집의 자식이거나 가족에게 외면당한 청소년들이 이

비용을 마련하기란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이다.

“최종 판문”이라 할 법적 성별 정정도 어렵다. 판단이 판사 개개인에게 맡겨져 있고, 보수적인 법원은 외과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에게는 허가를 잘 내주지 않으려고 한다.

김신엽 씨(트랜스 여성, 22세, 가명)는 법원에 “가출 후 독립생계를 꾸린 뒤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돼 있[어서] ... 트랜지션 비용 3000만 원을 마련하는 건 요원한 일”이라고 답했다가 결국 성별 정정 신청을 ‘기각’당했다(항고 중).

건강 상의 이유 등으로 외과 수술을 원하지 않는 트랜스젠더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이 성별 정정의 요건으로 외과적 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UN은 ‘고문’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네덜란드나 스웨덴 등 유럽 국가도 이를 강제 불임이나 마찬가지로 판단한다.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겪는 어려움을 대규모 설문과 심층 인터뷰로 생생하게 보여 준 이번 보고서 발간이 반갑다. 이런 현실이 더 많이 조사되고 알려지길 바란다.

나아가 국가는 실질적으로 트랜스젠더를 지원해야 한다. 청소년 트랜스젠더를 위한 질 좋은 상담소가 필요하다. 이들에게 적절한 조언을 줄 수 있도록 교사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의료적 트랜지션에 의료보험이 적용돼야 하고, 본인이 원하면 가능하도록 법적 성별 정정 과정이 대폭 간소화돼야 한다.

좌파가 이긴 칠레 대선, 이제 얼마나 바뀔까?

소피 스콰이어

12월 19일 칠레에서는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와, 좌파 대선 후보 가브리엘 보리치가 [결선 투표에서] 극우 안토니오 카스트를 꺾고 거든 승리를 축하했다.

보리치는 56퍼센트 대 44퍼센트로 승리했다.

2011년 교육 민영화에 맞선 투쟁을 이끌며 명성을 쌓은 보리치는 칠레 역사상 두 번째로 400만 표 넘게 득표한 대통령이 됐다.

이번 선거에 앞서 칠레에서는 2019년에 신자유주의와 불평등에 반대하는 강력한 대중 시위가 분출했다.

당시 권력층이 받아들여야만 했던 운동의 주요 요구 중 하나는 1973년에 집권한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독재 하에서 제정된 헌법을 개정하라는 것이었다.

만약 카스트가 승리했다면 극우를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하는 보리치

크게 고무했을 것이다. 카스트의 아버지는 제2차세계대전 당시 나치 장교였다가 문서를 위조해 칠레로 탈출한 자였다.

카스트는 낙태권과 동성결혼에 반대하고 정부 내 여성·성평등부를 폐지하고자 했다.

카스트는 브라질의 [강경 우익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자신을 지지

한다고 말하고, 피노체트의 “경제적 유산”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극우 저지

카스트의 이런 선거 운동을 보면서, 보리치를 적극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조차 카스트의 당선을 저지하려고 보리치에게 투표했다.

보리치는 자유 시장 경제를 개혁하

고, 연금 제도를 손보고, 선주민·성소수자 인권 수호를 약속했다.

이제 많은 노동자·빈민들이 변화를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보리치의 급진성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보리치는 선거 운동 내내 우파의 지지를 얻으려 애썼다. 그래서 보리치는 2019년 10월 항쟁 당시 “방화와 약탈”을 저지른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이 그런 혐의를 날조하고, 시위대에 가혹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은 무시했다.

보리치는 “바리케이드 금지법” 때문에 수감된 사람들에게 사면 촉구도 거부했다. “바리케이드 금지법”은 바리케이드를 쌓은 사람들을 가중처벌한다.

보리치는 2019년 11월 “평화 협정” 체결에 핵심적 구실을 했다. 이 “협정”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세바스티안 피네라를 구제하고, 시위 탄압을 주도한 자들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보리치는 2022년 예산안의 긴축 조

치를 이어가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약속하기도 했다.

보리치는 ‘광범전선’과 칠레 공산당이 속한 정치 연합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의회에서 좌·우파는 의석이 거의 동수여서 주류적 방식을 통한 변화는 저지될 가능성이 크다.

1990년 독재자 피노체트가 퇴진한 이래로 번갈아 집권한 우파와 좌파는 노동자·빈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실패해 왔다.

바로 그래서 2019년 10월에 대중이 빈곤과 불평등에 항의하며 들고 일어났던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 좌파 세력들은 대중의 에너지에 부응하지 못했고, 그 폭발적 항쟁의 에너지를 선거로 틀었다.

보리치의 공약 이행을 강제하고 그 이상으로 나아가게끔 하려면 의회가 아니라 거리와 일터에서의 운동이 필요할 것이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2786호 번역 김준호

청주 보안법 구속자들 변호인 인터뷰

“F-35 도입 반대는 표현의 자유, 주장만으로 처벌하는 건 전체주의적 발상”

지난 8월 청주에서 평화 활동가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공안 당국은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총북동지회’라는 단체를 결성했고, 국가기밀을 탐지해 북한 당국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들이 벌인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도 모두 북한의 배후 조종에 따른 일이라고 했다. 최근에 검찰은 이들의 동료 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피고인들은 제기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부동의했다. 그래서 증거 조사를 중심으로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12월 20일 박응용 씨 등 피고인 3명의 변호를 맡은 정병욱 변호사를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정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자체가 사라져야 할 악법이라 했고,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의 주장과 그 근거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하는 인터뷰 질문과 답변이다.

검찰은 청주 평화 활동가들의 F-35A 도입 반대 운동이 이적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F-35A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구든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F-35A 도입에 반대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나라 국민은 무조건 전투기 도입을 찬성해야 한다면, 그것 이야말로 독재죠.

이 분들이 F-35A 도입을 반대한다고 어디에 화염병을 던진 것도, 침입한 것도, 누군가를 폭행한 것도 아닙니다. 평화를 위해 반대한 것일 뿐이에요.

국가보안법은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더군다나 국가보안법 위반자에게는 벌금형이 없어요.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받고, 따라서 구속될 수 있어요. 그만큼 무거운 형벌입니다.

F-35A 도입 문제 같은 정부 정책이든 뭐든지 간에 누구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지, 이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재벌 비판, 연방제 통일 지지 등이 북한 당국과 유사하므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은 정당한 논리인가요?

북한의 ‘지령’이나 주장과 비슷하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면 왜 안 되나요? 우리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서, 왜 헌법에 명시된 자유와 민주를 누릴 수 없는 건가요? 북한 [당국이] 얘기하는 것과 동일하게 말할 수도 있어야죠.

적어도 우리 나라의 평균적인 국민들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판단할 수 있어요. ‘아, 북한과 동일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네. 그러면 좋아, 또는 싫어’ 하고요. 그런 주장을 접해서 판단하고 생각할 자유가 있어야죠.

주장만으로 처벌하는 것 자체가 전체주의적이고 히틀러식 발상이 아닐까 싶어요.

북한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북한과 접촉했다고 처벌받아야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보지만,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라고 하죠. 사실 남북 교류·협력을 하는 사람들 모두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처벌 안 받고, 일반 시민들은 북한과 접촉했다고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는데, [국가보안법은] 공평하지 않은 법입니다. 누구는 정치인 이어서 처벌을 피하고, 누구는 그렇지 않고, 국가보안법은 참으로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법률입니다.

청주 활동가들은 국가기밀을 북한에 보고했다는 간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민중당(진보당) 관련 정보나 여당 국회의원을 면담한 내용이더군요?

북한 당국이 모르는 것이라면 모두 국가기밀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심지어 공직된 사실을 포함해, 한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도 말이죠.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이, 우리가 읽고 수집하고 판단하는 모든 정보가 [북한에 전달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면 국가기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판례 자체를 바꿔야 해요. 그리고 그만큼 국가보안법이 정말 문제가 많아요.

국가보안법 자체가 매우 모순적인 법률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



평화적인 F-35 도입 반대 운동을 이적 행위로 처벌하는 건 부당하기 짝이 없는 국가 탄압이다

위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헌법 위의 악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한] 소크라테스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하지 않을까요? 소크라테스가 대한민국에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런 간첩 사건이 대선과 맞물리면서 나온 것 같아요.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을 분열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12월 15일 재판에서 검찰이 동영상 틀었어요.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장면이라면서요.

여기에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선, 이날 영상 검증을 위해 나온 국정원 직원 때문에 [법정 안에] 차폐막이 설치됐어요. 피고인들이 공개된 재판을 받는 게 기본이고, 굳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검사는 파일들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채 법정에서 검증을 했어요. 증거 능력이 있다고 채택된 증거들만으로 법관들이 유·무죄를 판단해야 하는데 말이죠. 따라서 법원에 제출도 안 된 것들을 검증하는 건 절차상 맞지 않았습니니다.

설사 동영상이나 사진들이 유·변작된 게 아니더라도, 영상 속 인물이 북한 공작원이 맞는지, 심지어 피고인들이 맞는지 등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즉, 아직도 밝혀진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관해서는 앞으로 다룰 게 많습니다. 예컨대, 피고인들은 압수수색 당시에 자신들의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요. 수사관 수십 명이 몰려 와서 누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었다고 하고요. 그런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됐다는 USB와 노트북 등에 대해서 피고인들은 본인의 물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 여부, 증거능력 여부 등에서 앞으로 가릴 게 많다는 것이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어려움은 없었나요?

피고인들은 국가보안법 때문에 무려 20년 동안 사찰을 받아 왔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권력기관이 개인들을 어떤 혐의로 오래 사찰한다는 게 과연 정당할까요?

피고인 중에 박응용 씨는 [난치병인] 다카야수동맥염을 앓고 있어요. 이는 산업 재해로 인해 생긴 병으로 알아요. 당연히 이 분은 구속 상태를 힘들어 하죠. 심혈관 질환이어서 약도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피고인들의 보석을 신청했고 박응용 씨에 대해서는 구속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구속된 3인은 원래 3월에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데, 최근에 검찰이 추가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를 근거로 구속기간을 연장시킬 것 같아요.



11월 보안법 폐지 1인 시위 중인 정병욱 변호사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가 있나요?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라면 김일성 회고록 같은 책도 선택하고 읽을 자유, 사상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돼야 하지 않을까요?

국가보안법 폐지가 해결책일 겁니다. 저는 국가보안법 사건을 이번에 처음 맡았어요. 그렇지만 이번 사건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이번 재판이 보안법의 악법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돼 지금까지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이 모두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인터뷰·정리 김영익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주) 레포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드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10-6491-2792, ws@wspaper.org



온라인에서도 만나보세요



노동자 연대

wspaper_org

@wspaper

노동자연대TV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기사를 빠짐없이 받아 보세요

텔레그램 안드로이드 '노동자 연대 알리미'



바로가기 링크 모음

플랫폼 규제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

12월 임시국회 쟁점 법안 중 하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플랫폼법)이다.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을 방지하자는 법안이다. 플랫폼 기업이 중소기업과 계약할 때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면, 플랫폼·IT기업들은 ‘중복 규제’, ‘국내 플랫폼 기업 역차별’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12월 6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온라인플랫폼법을 반대하는 토론회를 열자, 그 토론회장 앞에서 참여연대·민변·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쿠팡시장침탈저지전국가영업비상대책위원회가 함께 ‘플랫폼 기업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수수료, 광고비 등으로 중소기업인에게 횡포를 부려 왔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다.

카카오가 택시와 (일부 지역) 공유자전거 사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점하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려 한 사례, 쿠팡이 시장점유율 경쟁을 위해 뿌린 할인 쿠폰 비용을 입점 업체들에게 전가한 사례 등.

쿠팡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자사 또는 계열사 상품을 직접 판매하면서 다른 입점 업체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 온 것(일명 ‘심판이 선수로 뛰는’ 행위)도 불만을 사왔다.

즉, 정보 기술을 통해 “공유경제”가 도래할 것이라던 장밋빛 환상과 달리, 플랫폼 시장도 여느 시장들과 다를 바 없이 위계적이고 독과점 횡포가 만연

한 곳이라는 게 드러났다.

국가의 지원

그러나 거대 IT·플랫폼 기업들이 문어발식으로 확장하고 시장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는 데는 정부의 도움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공격적 기업 결합으로 덩치를 키울 수 있게 허용해 온 장본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네이버와 카카오는 총 73건의 기업 결합 심사를 요청했는데 공정위는 모두 승인했다.(민주당 윤관석 의원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인기가 좋다. 올해 네이버와 카카오는 국내 시가총액 순위에서 각각 4, 5위를 차지했다. 1~3위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전통적 재벌 대기업인 것을 감안하면, 정말 많이 따라잡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도 IT·플랫폼 산업을 더 크게 육성하려 한다. 경제 성장과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11월 당정은 온라인플랫폼법의 규제 대상과 내용을 대폭 축소하는 후퇴를 했다. 가장 큰 기업 몇 곳만 일부 규제하고 나머지 플랫폼 기업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켜 준 것이다.

자본의 집중

문재인 정부가 플랫폼 기업들의 횡포를 억제할 수 없는 더 근본적 이유도 있다. 소수 거대 자본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은 자본주의에 내재된 경향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이를 ‘자본의 집중’이라고 《자본론》에서 설명했다. 자본 사이의 경쟁으로 인해, 도태된 자본은 제거되고 살아남은 자본이 전체에서 더 큰 부분을 지배하게 된다. 마르크스는 이를 “자본가에 의한 자본가의 수탈이며, 다수의 소자본을 소수의 대자본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플랫폼 기업을 규제해 독과점 횡포를 막겠다는 생각은 오래된 재벌 개혁론(혹은 재벌 해체론)의 새로운 버전이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그대로 두고 재벌만 없애는 것(다수 소자본들이 경쟁하는 시장)은 역사적으로 성공한 바 없는 공상적 목표다. 설사 그런 시장을 만들어도 자본주의적 경쟁은 금세 집중 경향을 만들어 내기 마련이다. 그 결과 새로운 거대 기업 권력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독점 규제?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온라인플랫폼법을 꺼내든 것은 왜일까?

첫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광범한 대중의 불만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공정위가 일부 플랫폼 기업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나 대선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인기가 많이 떨어진 민주당이 중소기업인을 비롯한 중간계급들의 불만을 달래려는 듯하다.

둘째, IT·플랫폼 기업들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서 국가

가 이 기업들을 어느 정도 통제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있다.

이 산업들은 첨단 정보 기술을 사용하고, 이는 사이버 안보 등과 밀접하다. 최근 미국 등 여러 선진국들이 자국 테크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그럼에도 앞서 지적했듯이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플랫폼 때리기’를 하는 것도 아님을 봐야 한다. 예컨대 민주당이 내놓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은 플랫폼 대기업을 일부 규제하기도 하지만, 노동법을 예외 없이 적용하라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오랜 요구를 무시하고, 결국 플랫폼 기업 사용자들의 책임을 면제해 주려 한다.

법안 지지?

중소상공인들뿐 아니라 일부 노동자들도 온라인플랫폼법 통과를 지지한다. 12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과의 온라인플랫폼법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인 단체들과 더불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 참여했다.

물론 노동운동이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더라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할 수는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인이나 노동자가 플랫폼 기업의 횡포에 고통받는다고 해도, 중소기업인들과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똑같지는 않다.

중소상공인들은 플랫폼 기업의 갑질에 고통받지만 동시에 플랫폼 기업이 제공한 시장 속에서 자기 사업을 영위하고 확대하려 한다. 그래서 일부는 반(半)프롤레타리아적 처지이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고용 중인 노동자를 착취해야 하는 이해관계가 생긴다.

그 점에서 노동계급이 플랫폼 독점에 맞서 중소기업인 일반과 함께 동맹할 수 있다는 노동운동 일각의 생각은 서로 다른 계급들 간에 충돌하는 물질적 이해관계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마련한 법안을 고리로 그렇게 하면 실제로는 거대 자본 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힘을 보태주는 꼴이 될 수 있다.

노동권 인정, 사용자 책임 인정, 노동자들이 받는 수수료 인상 등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플랫폼 기업의 착취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고무·확대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런 투쟁들이 힘을 발휘할 때 기업들을 물러서게 할 수 있다.

양효영



사진 포커스

“전쟁터 같은 코로나 전담병원”

처우 개선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군산의료원 노동자들

코로나 전담병원인 군산의료원 노동자들이 12월 1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군산의료원은 전라북도에서 코로나19 병상의 약 25퍼센트를 책임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2년 동안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며 헌신해 왔다. 군산의료원 사측은 올해 100억 원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등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지난 2년간 코로나 전담병원은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하고 절규한다. 12월 17일 보건의료노조 군산의료원지부 파업 출정식 모습.

사진 출처: 보건의료노조

인력 총원과 조건 개선은 미적, 요금만 인상 약속 배신한 CJ대한통운에 맞서 택배 노동자 파업 결의

신정환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노동자들이 12월 28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사측이 약속했던 분류 인력 총원과 처우 개선은 이행하지 않은 채, 되레 노동시간 연장, 노동강도 강화 등으로 조건을 악화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사측에 대한 규제는커녕 면죄부를 준 정부(국토교통부) 규탄과 투쟁도 다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지난해와 올해 택배 노동자 21명이 과로사했다. 노동자들은 죽음의 배달을 바꾸려고 지난해부터 투쟁에 나섰고, 올해 6월 파업을 통해 택배사, 정부·여당 등과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에 합의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기사들을 분류 작업에서 제외하고, 노동시간을 주 60시간으로 제한하며, 고용·산재 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한 비용은 택배 요금을 인상해(건당 170원) 충당하기로 했다. 또한 이 합의를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택배기사의 고용을 최소 6년간 보장하기로 했다.

그런데 택배시장 점유율 48퍼센트로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이 합의 이행을커녕 요금 인상으로 수익 증대만 꾀하는 것도 모자라, 노동자들의 조건 후퇴 공격에 나서고 있다.

약속 배신

CJ대한통운은 요금 인상액 170원 중 겨우 60원만 분류 인력 총원과 사회보험료로 쓰고, 나머지 금액은 회사가 챙기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택배 기사들이 분류 작업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내년까지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회사가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며 노동자들은 열받아 하고 있다.

“현재 우리 터미널에 분류 인력이 10명이 있는데, 기사들이 분류 작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려면 분류 인력이 7명은 더 필요합니다.”(배철운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김포지회장)

택배노조는 요금 인상분의 대부분을 CJ대한통운 사측이 가져가, 이에 따른 수익 증가액이 연 35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4월 택배 요금이 오른 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올랐다. 올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1313억 원)이 이미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1267억 원)을 넘어섰다.

뿐만 아니라 택배기사들의 집회(판매자에게 물건을 받아 터미널로 옮기는 것) 수수료를 삭감해, 집회 업무 비중이 높은 노동자들은 임금이 월 40만 원 이상 줄었다고 한다. 지난 30년간 노동자들의 수수료는 한 번도 올리지 않았으면서 말이다.



요금 인상 등으로 최대 매출과 높은 이익을 기록하면서도 CJ대한통운 사측은 인력 총원, 조건 개선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 12월 20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총파업 선포대회

노동자들은 CJ대한통운이 “과로사를 돈벌이에 이용한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표준계약서에 ‘독소 조항’ 가득

노동자들을 분노케 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사측이 국토교통부에 표준계약서를 제출했는데, 그 부속 합의서에 노동자를 장시간·고강도 노동으로 내모는 독소 조항들(당일 배송, 터미널 도착 상품의 무조건 배송, 주 6일제)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적 합의의 당사자이기도 한 국토교통부는 이 부속합의서를 승인해줬다.

일명 “죽음을 부르는” 당일 배송은 노동자들이 가장 심각한 독소 조항이라고 입을 모은다. 노동시간을 줄이려면 오전 중에는 짐을 싣고 배송을 나가야 한다. 그런데 당일 배송을 하려면 오후에 터미널에 도착한 물건들 때문에 다

시 돌아왔다가 배송을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한밤중 심지어 새벽까지 배송하고 퇴근하게 돼 과로사를 낚는 주범 중 하나다.

터미널 도착 상품의 무조건 배송도 노동조건 악화 조항이다. 그간 노동자들은 운반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부피가 큰 물건이나, 규격에 맞지 않는 물건들은 배송을 거부하며 개선을 요청해 왔다. 이런 물건들은 옮기는 데 시간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신체에 무리를 주고, 규격에 합당한 수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피가 커서 공간을 차지해 한 번에 다 실을 수 없어 터미널을 수차례 왕복해야 한다.

주 6일제는 충분한 휴식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노동자들은 독소 조항들이 관철되면 과로사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며 부속합의서를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12월 20일 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향후 대정부 투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택배노조는 사측에 근로격계 질환을 유발하고 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저상탑차(화물칸이 낮은 택배차) 대책 마련, 노동조합 인정 등도 요구하고 있다.

택배시장 경쟁 속 골병드는 노동자들

코로나19 이후 택배 물량은 계속 증가 추세이며, 그에 따라 기업 간 경쟁도 더욱 격화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택배 2~3위 업체들(롯데, 한진)의 추격도 뿌리쳐야 하고, 쿠팡 등 자체 배송 역량을 갖춘 이커머스 업체들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려 한다. 최근 ‘풀필먼트 사업’(판매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 배송부터 보관, 재고관리, 교환과 환불까지 모든 과정을 대행하는 서비스)이 업계 추세인 것에서 보듯, 유통과 물류(택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업체들 간 합병과 제휴, 사업 확대가 강화되고 있다.

최근 CJ대한통운이 공격적 투자(풀필먼트 구축을 위해 2023년까지 2조 5000억 원 투자 계획을 발표)에 나선 배경이다. 그리고 요금 인상분을 자신들의 주머니로 가져가며, 당일 배송 등 노동자들에게 속도 경쟁을 강요하려는 이유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지금의 조건 후퇴 시도가 수익성 증대에 걸림돌인 택배노조와 조합원들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고 지적한다. 지난가를 한 대리점 소장의 사망 사건을 이용해, 사측과 친 사용자 언론들, 우파 정치인들이 택배노조를 마녀사냥하고 조합원들을 위축시키려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과 분노도 상당하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전체 지회장들(87명)은 12월 20일 회의를 하고, 12월 28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결의했다. 20일 열린 파업 선포 집회에 참가한 지회장들의 투지와 기세가 높아 보였다.

“CJ대한통운이 뚫리면 모두가 뚫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투쟁을 준비합니다.”(김기홍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남울산지회장)

“김포장기대리점 소장 사망 사건 후 어려웠던 분위기를 바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투쟁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배철운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김포지회장)

이번 파업에 비노조원들의 지지도 상당하다. 택배노조가 12월 12~13일에 CJ대한통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조합원은 86퍼센트, 비조합원은 74퍼센트가 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파업 조직을 시작했는데 조합원들의 참여 의사도 높아지고 있고, 비조합원들의 노조 가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김원진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성남지회장)

투쟁으로 얻은 성과를 회수해 가려는 사측에 맞선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응원한다. 투쟁이 강력하게 벌어질 수 있도록 지지와 연대가 확대돼야 한다.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표준계약서에도 사측은 독소 조항을 잔뜩 집어넣었다

화약고로 떠오른 대만해협

대만 문제는 무엇이며 왜 악화되고 있는가?

김영익

이 글은 같은 제목으로 진행된 노동자 연대 온라인 토론회의 발표문을 조금 손본 것이다.

요즘 대만해협의 긴장이 심상치 않다. 10월 6일 대만 국방장관 추귀정은 “내가 군에 몸담은 40년 동안 [지금] 가장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놓고 전쟁을 벌이는 불길한 시나리오도 언론에 자주 언급된다.

양안관계, 즉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최근 들어 악화일로이고, 대만해협은 미국과 중국의 무력 시위로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1월 바이든이 취임한 이래 11월까지 미국 군함이 11차례나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한 달에 한 번 꼴이다. 미국이 벌이는 ‘항행의 자유’ 작전에는 미국의 동맹국 군함들도 동참하고 있다.

중국 시진핑 정부도 강경하다. 대

만의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군용기를 빈번하게 보내어 대만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10월 1~5일에는 중국 전투기와 폭격기 도합 150여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

대만을 둘러싼 긴장은 11월 16일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표출됐다. 바이든은 “대만해협의 현상 변경”을 시도하지 말라고 중국에 경고했고, 시진핑은 “대만 독립·분열 세력이 도발하고 심지어 레드라인을 넘으면 부득이하게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지금 대만해협은 수년 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화약고로 꼽힌다. 왜 대만해협의 긴장이 커지고 있을까?

이 글에서는 첫째, 양안관계의 기원과 변화를 살펴보고, 둘째, 그것이 왜 미·중 갈등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지, 셋째, 왜 이 문제가 한국에게 ‘강 건너 불’이 아닌지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안관계의 근본적 해결책은 무엇인지 얘기하려 한다.

대만 문제(양안관계)의 기원

양안관계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대만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자. 1945년 일제에서 해방된 대만은 곧 국민당의 통치를 받게 됐다. 1949년 국민당 장제스 정권이 중국공산당과의 내전에서 패배해 대륙에서 대만으로 도피했다.

국민당과 함께 대만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외성인(外省人)이라고 한다. 장제스 정권의 외성인들이 대만에서 정치·경제의 요직을 차지했다.

반면 국민당이 오기 전부터 대만에 살던 한족인 본성인(本省人)들은 도리어 이등시민 취급을 당했다. 표준어를 쓰지 못하는 본성인들은 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일자리를 잃었고, 일본인들이 떠나며 남긴 적산(敵産)은 모두 국민당과 외성인들이 차지했다.

국민당 정권은 본성인들의 반발을 총칼로 다스렸다. 1947년 2월 본성인들이 차별에 항의해 대거 시위를 벌이자, 군대를 동원해 2만 명 넘는 사람들을 학살했다(2·28 사건). 이후 국민당 정권은 ‘대륙 수복’을 핑계로 1987년까지 계엄령을 유지했다.

한편, 중국공산당은 1949년 이후 즉각 대만을 점령해 무력 통일을 완수하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이 이를

가로막았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자 미국은 바로 제7함대를 보내어 대만해협을 봉쇄했다. 중국의 대만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1954년 미국은 대만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대만을 한국 등과 함께 냉전의 전초 기지로 삼았다. 이 무렵 양안 간에는 무력 충돌이 빈번했다. 특히 1954~55년, 1958년에 두 차례의 대만해협 위기가 일어나 중국과 대만 양측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다.

양안관계의 두 번째 시기는 1970년대 미·중 데탕트와 관련있다. 1972년 2월 베이징에서 닉슨과 마오쩌둥의 회담이 열리면서, 양안관계가 크게 바뀌게 됐다. 미국이 소련을 고립시키고자 중국과 비공식 동맹을 맺었던 것이다. 이제 미국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의 주장을 존중하기로 하고, 1979년에는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며 대만과의 국교를 단절했다.

그러나 미국은 비록 대만과의 국교를 단절했지만, 대만을 미국의 세력권에서 놓아줄 생각은 없었다. 국교를 끊은 후에도 미국은 국내법인 대만관계법과 무기판매 등으로 대만의 안보를 보장했고,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양안관계에 관여해 왔다.

냉전 해체와 양안관계

양안관계의 기류는 냉전 해체 이후 다시금 바뀌기 시작했다. 미국 정계의 유력 인사들은 점점 중국을 위협으로 보게 됐다. 미국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미·일 동맹 등을 정비했다.

중국은 중국대로 경제 성장 덕분에 패권을 주장하는 데 자신감을 갖게 됐다. 식민지 시대에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고자 했고, 양안 통일을 절대 포기 못할 숙愿으로 여겼다. 그러면서 미국의 중국 견제가 대만의 독립 선언을 부추길까 우려했다.

이런 기류 변화는 1996년 대만해협 위기로 나타났다. 중국은 대만 인근에서 미사일 발사와 실탄 훈련을 벌였는데, 당시 대만 총통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독립 주장을 악화시키려는 것이었다. 당시 미국은 두 개의 항모전단을 대만해협에 보내어 대만 방어 의지를 천명했다.

이후 미국은 1996년 일본과 ‘21세기 미일공동안보선언’을 내놓고, 1997년에는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했다. 대만해협 분쟁 같은 “주변 사태”에 일본과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반면 중국은 미군 항모전단에 맞서기 힘든 자국 군사력의 한계를 절감하고, 이후 군사력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물론 냉전 해체 이후 상황은 모순적이다. 민간 교류가 허용돼 양안관계는 활발해졌다. 무역·투자 관계도 점차 깊어져, 2002년에 중국은 대만의 제1 무역상대국이 됐고 대만 기업들의 중국 투자도 급증했다. 2010년에는 중국-대만의 자유무역협정인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이 체결됐다.

중국-대만 당국 간 협상도 이뤄져, 1992년에 ‘하나의 중국’에 관한 잠정 합의도 했다(이른바 ‘92공식’).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합의하되, 그 해석은 중국과 대만이 각자 알아서 하자는 게 합의의 골자였다.

냉전 해체 이후의 이와 같은 모순된 상황 전개 속에서 대만의 공식 정치권은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대만 공식 정치의 양대 세력은 국민당과 민주진보당(이하 민진당)이다. 국민당은 중국이 주장하는 일국양제식 통일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양안의 점진적 통일을 지향해 왔다. 반면 국민당 독재에 대한 반발로 성장한 민진당은 양안 통일에 반대한다. 대만 국가는 중국과는 분리된 정치적 실체라는 것이다. 민진당은 2000년부터 여러 차례 집권해 왔고, 그 소속의 현 총통 차이잉원은 92공식을 인정하지 않는다.

외성인 중심의 독재 정권에 억압받은 경험, 중국의 강압적 행동에 대한 반발로 대만에서는 ‘우리는 중국인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점차 커져 왔다. 1994년 한 여론조사에서 ‘나는 대만인이다’ 하는 답변은 20.2퍼센트였지만, 올해 조사에선 63.3퍼센트까지 올랐다. 특히, 중국에 일국양제 형태로 편입된 홍콩에서 민주적 권리가 후퇴하고 2019년 이후 보안법 제정 등으로 공안 탄압이 자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런 흐름이 더 커졌다.

그렇다고 해서 대만의 대중 정서가 독립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은 아니다. 대만 대륙위원회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다수가 양안관계의 현상 유지를 선호했다. ‘당분간 또는 무기한 현상 유지’를 선택한 비율이 84.9퍼센트다. ‘가능한 빨리 독립 선언’을 선택한 사람은 6.8퍼센트에 불과했다.

한편 중국 지배자들은 대만 내 분리 독립 주장을 예의주시하고 거칠게 반응해 왔다. 2005년 중국은 반국가분열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대만이 독립하거나 평화통일의 틀이 깨지는 경우’에 중국 정부가 ‘비평화적 수단’을 즉각 동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유사시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경고이자 위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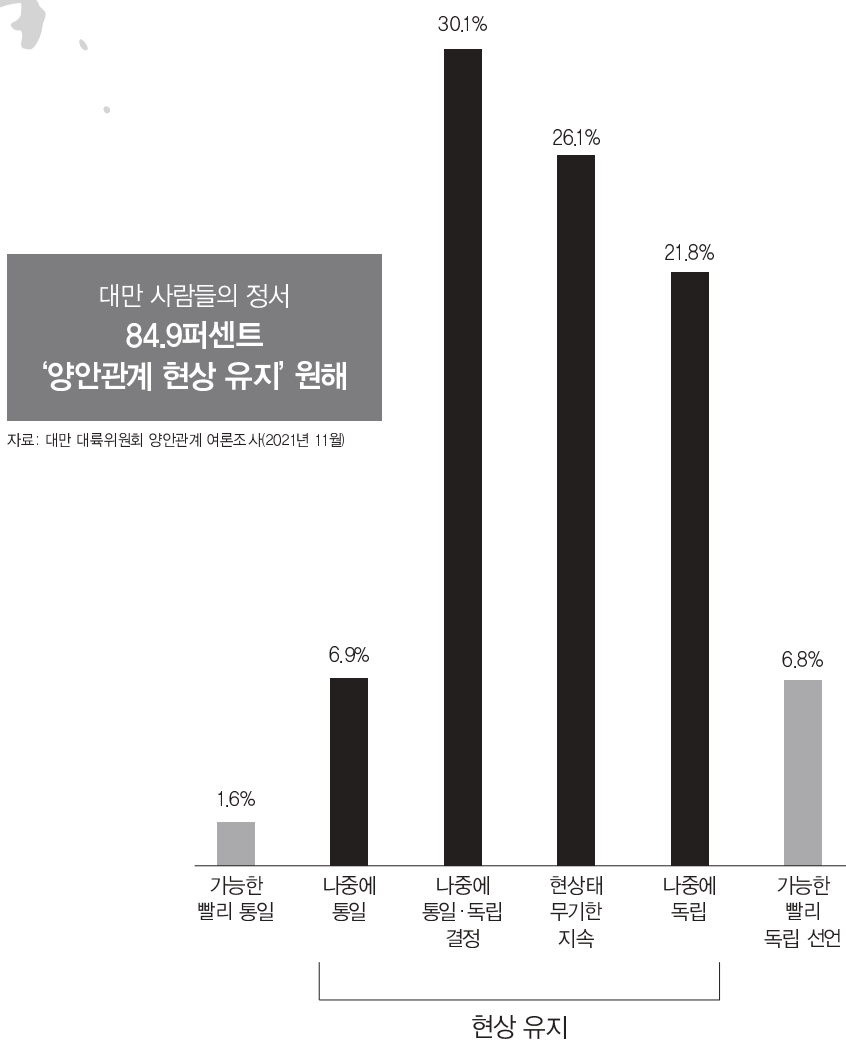
중국 전투기 등의 빈번한 대만 접근
특히 10월 1~5일에 총 150여 대

평택 기지
오산 공군기지

성주 사드 포대

제주 해군기지

1월 바이든 취임 이후 11월까지
미 군함 11차례 대만해협 통과



미·중 갈등과 양안관계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관계가 양안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현재 양안 간의 긴장 증대도 미·중 갈등의 악화라는 맥락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수십 년의 경제 성장으로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됐고,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다.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중국은 인도·태평양에서 나름의 제국주의적 목표를 성취하려고 한다.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을 밀어 내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중국 재통일도 완수하기를 바란다.

중국의 이런 시도는 미국의 세계 패권 지위를 대체하려는 시도는 아니지만, 미국 지배자들이 보기에는 중대한 도전이다. 제2차세계대전 이래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쥐었고, 이는 미국의 세계 패권에 매우 중대한 기반이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만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장악한다면 태평양에 군사력을 투사하기 쉬워지고 지정학적 영향력도 매우 커질 것이다. 그만큼 미국의 아시아 동맹 체계도 크게 타격을 입을 것이다.

미국 지배자들이 중국의 위협을 우려하고 도전을 누르려고 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도 변해 왔다. 일례로 2019년 미국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 대만을 '국가'로 명시해 중국을 자극했다.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 때보다 대만에 훨씬 더 많은 미국 무기를 판매해 줬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대만 정책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았다. 심지어 대만 문제로 동맹들을 결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는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한 발 더 나아갔다.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거론됐는데, 이처럼 대만 문제가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것은 52년 만에 처음이었다. 또 바이든 정부는 영국,

호주와 오커스(AUKUS) 군사동맹을 결성하면서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바로 이 핵잠수함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지에서 중국을 견제할 유용한 무기가 될 것이다.

미국의 변화된 대만 정책은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부르고 있다. 중국은 대만의 독립 선언을 방지하지 못하면, '하나의 중국' 원칙이 훼손된다고 본다. 그러면 애국주의를 강조해 온 중국 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이 악화될 것이고, 분리 독립을 원하는 중국 내 소수민족들도 자극할 것이다. 소련이 여러 민족 공화국들로 해체되면서 쇠락하는 것을 지켜 본 중국 당국은 절대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 한다.



10월 초 대만 남쪽 해상 미국·영국·일본 등 6개국의 해상 연합훈련

대만해협 위기와 한국

대만해협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가능성은 이제 양국의 전략가들이 공공연히 논의하고 검토하는 문제가 돼 있다.

물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결심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긴장이 점증하면 예기치 않은 사건이 커다란 충동로 변질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과 중국 양측이 대만 문제를 잘 관리해야 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핵무기를 보유한 데다 경제적으로 상호 밀접한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놓고 전쟁을 벌이는 것은 말 그대로 "공멸"을 의미한다는 게 그 근거다.

그러나 제1차세계대전 당시 영국과 독일은 경제적으로 상호 밀접했지만, 이 점이 양국의 전면전을 예방하지 못했다. 냉전 당시 소련과 미국 통치자들도 핵전쟁 직전까지 여러 차례 갔었다.

만약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이 여기에 휘말릴 공산이 크다. 특히, 지금 바이든이 공들이고 있는 동맹 체계를 따라 충돌이 빠른 속도로 변질 수 있다. 한국도 이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미 미국은 대만해협 분쟁 등

에 대비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관찰시켰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바깥의 분쟁에도 개입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타협했다.

그래서 요즘에 미군 고위 인사들이 주한미군의 임무에 관해 얘기할 때 전략적 유연성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1월 주한미군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는 주한미군의 임무에 한반도 방어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역내 안정화 지원"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 내 군사기지가 유사시 미군의 발진 기지가 돼 한반도가 대만해협 전쟁에 휩쓸릴지 모른다. 중국에 가장 가까운 미군기지인 평택 기지와 오산 공군기지, 유사시 미해군의 거점이 될 제주 해군기지, 중국 미사일을 레이더로 감시하고 막을 성주 사드 포대가 바로 그런 곳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를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행동은 대만해협의 긴장을 보태고 한국을 전쟁에 휘말리게 만드는 위험한 도박이다.

대만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

앞서 살펴봤듯이, 대만해협은 미국과 중국 두 제국주의 국가가 갈등하는 가장 위험한 지역이 됐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패권 유지 전략 속에서 양안관계의 긴장을 증대시켜 왔다. 한국의 좌파는 한국 정부가 그런 미국 편을 드는 것에 분명하게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해서도 안 된다. 혹자는 중국이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는 진보적 세력이라고 보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중국도 국내에서 소수민족을 억압하고, 미국과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제국주의 국가일 뿐이다. 즉, 한국 좌파는 미국과 중국 두 제국주의와 그들의 긴장 증대 행위 모두에 반대해야 한다.

중국과 대만의 좌파들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먼저, 자국 정부가 무력까지 동원해 대만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국제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대만의 자결권을 지지해야 한다. 분리 독립을 포함해서 말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중국 당국과 같은 편으로 보여 대만 노동자·대중과의 연대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또 중국 지배자들이 한족 민족주의를 부추겨 내부 저항을 억제하려는 것에도 맞서기 어려울 것이다.

대만의 국제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양안 문제에서 국민당과 민진당 모두에게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중국

과 미국 제국주의 모두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야 한다. 사실, 대만은 오래전부터 독자적인 자본 축적의 중심을 형성해 왔고 오랫동안 중국과는 별개의 독립 국가로 지내왔다.

민진당 차이잉원 정부는 통치 명분을 세우고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는 수단으로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데다가, 바이든의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미국·일본 제국주의와 협력을 다지고 있다. 대만의 국제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민진당에 종속돼선 안 되고, 노동계급의 단결과 계급투쟁에 헌신해야 한다.

양안관계를 바라보는 좌파의 출발점은 통일이나 독립 선언이 아니라 양안 노동계급의 단결이어야 한다. 중국과 미국 제국주의 모두에 반대하면서 대만해협이 새로운 전쟁의 발화점이 되지 않게 막을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이 바로 양안관계에서 좌파가 추구해야 할 점이다.



12월 16일 온라인 토론회

화약고로 떠오른 대만해협:
대만 문제는 무엇이며
왜 악화되고
있는가?
영상 보기





사진: 로버트 로버트/게티이미지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다” 낙태 금지는 여성들을 위험한 낙태로 내몰 뿐이다. 포틀랜드에서 열린 낙태권 보장 시위

미국 우파의 낙태 전쟁과 그에 맞선 운동

이사벨 링로즈

낙태를 금지하면 그 결과는 언제나 똑같았다. 여성들은 더 위험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뒷골목 낙태 시술로 내몰렸다.

이제 미국에서는 이것이 현실이 되고 낙태 시술자를 적발하는 데에 현상금이 걸릴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뒷받침하는 주요 판례인 ‘로 대 웨이드’ 판결의 효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州) 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릴 듯하다.

연방대법원은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텍사스주의 새 낙태금지법, 이른바 텍사스 ‘상원 법안 8호’(SB8)는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한다.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데, 근친상간이나 강간에 의한 임신도 예외로 두지 않는다.

텍사스주에서 시술된 낙태의 85~90퍼센트는 임신 6주 이후에 시술된다. 많은 여성들이 임신 6주 이전에는 임신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

텍사스주에서는 이 법이 발효된 지 몇 주 만에 낙태 시술 건수가 거의 반토막 났다.

이 법은 사상 최초로 민간인이 — 텍사스 주민이 아니어도 된다 — 이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소송을 걸고 ‘손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시술을 받는 여성은 소송 대상이 아니지만, 의

료진과 심지어 그 여성을 태워 준 우버 기사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연방대법원은 이 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두 차례나 기각했다. 그 후 12월에 연방대법원은 이 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 하나가 계속 진행되도록 허용했지만, 이것은 낙태 시술자들이 일부 주정부 관료들에게 연방 법원 소송을 걸 수 있게 할 뿐이다.

데니스 로드리게스는 텍사스주의 낙태 지원 단체 ‘텍사스 접근권 평등 기금’의 활동가다.

로드리게스는 텍사스주 법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매우 무서운 징조”라고 하면서, 이미 사실상 낙태를 할 수 없었던 텍사스의 현실을 전했다.

텍사스주에서 벌어진 일은 앞으로 절반가량의 미국 주들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

“그전에도 텍사스주 사람들에게 낙태는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하이

드 수정안’이 도입된 결과, 모든 형태의 낙태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차단됐습니다.”

미국에는 전국민 무상 단일 건강보험이 없고, 저소득층 대상 연방 공공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이드’가 있다. 미국인 5분의 1이 메디케이드 대상자다.

로드리게스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낙태 시술 비용으로는 정부 재정이 한 푼도 쓰일 수 없어요. 그래서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은 의료보험으로 낙태 시술을 받을 수가 없고 시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텍사스주 법은 민간 의료보험이 낙태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도 금지한다.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해도 낙태 비용에 보험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과부하

로드리게스는 그 결과 인근 주들

에 “과부하”가 걸렸다고 했다. “해당 주의 낙태 시술에 더해, 텍사스주 사람들이 낙태를 하러 몰려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약이 밀리고 있어요.

“지금은 평균 대기 기간이 2~3주 정도 됩니다. 어떤 진료소들은 6주 후까지 예약이 꽉 차 있어요. 법이 불필요하게 임신 상태를 지속시키고 있는 겁니다.”

로드리게스는 임신 12주 이하인 경우 낙태 시술에 최소 500~600달러가 든다고 전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단체에 연락하는 사람들에게는 마련하기 쉽지 않은 거금입니다. 임신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도 커집니다. 우리 단체에 연락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시술 비용을 모으느라 후기 낙태 시술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비용을 모을 때쯤 되면 비용이 더 커지는 겁니다.”

텍사스주 법에 따라 의사들은 의무적으로 여성들에게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보여 주고, 그 사진을 상세히 설명하고, “낙태에 관한 거짓말들”을 늘어놓아야 한다.

그 거짓말에는 자살이나 유방암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이런 경악스러운 낙인 찍기는 SB8 제정 이전부터 텍사스주 사람들이 받았던 제약의 일부입니다.

“사람들은 텍사스주 안에서 이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텍사스주 면적은 남한의 일곱 배 가까이 된다.] 90퍼센트 이상은 낙태 시술자를 찾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수많은

시골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12시간을 이동해도 텍사스주를 못 벗어날 수 있어요. 차를 타고 낙태 시술자를 방문하기가 더욱 어려운 거죠.”

‘낙태 시술자 표적 규제(TRAP)법’ 때문에 진료소를 늘리기도 어렵다.

낙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선택의 폭은 계급과 인종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로드리게스는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낙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돈과 가용 자원이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대개는 백인이고 중산층이죠. 그래서 저희가 활동에서 언제나 인종적 정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로드리게스는 낙태 시술을 받으려 한다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을 가장 많이 당하는 사람들은 “흑인과 선주민, 유색인종들”이라고 말한다.

“지금 오克拉호마주에서는 한 선주민 여성이 유산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를 당하고 있어요. 고의로 유산을 했다고 짐작하는 거죠.”

헌법 불합치

로드리게스는 미국 남부 주들에서 낙태금지법을 밀어붙이는 것이 낙태 문제를 연방대법원으로 가져가려는 우파의 전술이라고 했다.

텍사스주 법원에서는 SB8법에 대한 소송이 제기돼 그 법이 주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현재 그 판결이 다른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다”고 로드리게스는 설명했다.



텍사스주의 새 낙태금지법은 낙태를 거의 완전히 금지한다. 텍사스주의 한 여성 병원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포틀랜드에서 열린 낙태권 보장 시위

“이들은 일부터 이렇게 혼란을 부추깁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이 사태를 이해하기를 원치 않는 거죠. 반면 저희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상의 합법성으로는 불충분하다. 로드리게스는 이렇게 말했다. “낙태를 시술하고 지원할 사람이 없으면 낙태권의 법적 보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이 나오기를 바라지만, 우리 권리를 지키는 데에서 사법 체계에 대한 의존을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점을 사람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연방대법원이 미시시피주 낙태금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다면, 여러 주 정부들이 이를 이용해 다른 권리들도 공격할 것입니다. 성소수자의 결혼할 권리가 그 다음이 될 수도 있어요. 체제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지 않고 있으며 그랬던 적도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야 해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권리를 방어하고 더 대담하게 외쳐야 해요. 낙태권 지지도 더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낙태에 대한 접근권은 그저 형식적으로 낙태권을 인정받는다고 해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지

“낙태에 대한 접근권이란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지지·지원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보건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 아등바등

해야 하는 상황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어요. 낙태권과 관련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낙태에 대한 접근권이 왜 필요한지 등도 알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낙태를 가로막는 장벽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없애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계속 싸우고 있어요. 정부는 낙태에 재정을 지원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전국민 단일 의료보험 체계] 같은 정책들의 도입을 위해 적극 활동하며, 낙태에 대한 보장을 여기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접근권 평등 기금’의 핵심 사업은 사람들이 낙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낙태권 옹호 활동뿐 아니라 낙태 시술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도 한다. 낙태를 위해 텍사스주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지원한다.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정서적 지원도 제공합니다. 1:1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도 있고 상호 부조 모임도 있습니다.”

이 단체는 “풀뿌리 지도자들이 기층을 조직할 수 있도록” 텍사스 전역에서 낙태권과 재생산 건강권을 위한 캠페인에 도움이 되는 교육 행사에도 재정을 지원한다.

“저희는 낙태 문제가 왜 모두의 문제인지를 알리기 위해 여러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SB8법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알리기 위해 노동조합들과 연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믿을 수 없다, 거리 투쟁이 필요하다

낙태권에 대한 위협은 기존 서비스를 지키고 더 확대하기 위한 더 큰 반격으로 응수해야 한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임신 15주 이상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낙태 금지법의 합헌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합헌 결정이 나면 1억 3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낙태권에 대한 접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이미 21개 주는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거나 악화시키는 즉시 낙태를 금지하거나 낙태에 대한 접근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낙태권을 헌법적으로 인정한 판례다. 이 판결은 주정부들이 임신 12주 차 이하 여성의 낙태를 금지할 수 없게 하면서도, 개별 주들이 그 이후의 낙태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했다.

나아가 1992년 ‘가족계획협회 대 케이지’ 판결에서 법원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능력”을 갖게 되는 시점인 임신 24주 이후에만 낙태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두 판결 모두 여성에게 자기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낙태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참 못 미쳤다.

하지만 두 판결은 모두 획기적인 것으로 여겨졌고, 그 판결들로 그나마 보장된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 이어졌다.

‘로 대 웨이드’

현재 우파가 연방대법원에서 편 논리는 미국 헌법이 낙태에 중립적임

로 낙태를 규제할 권한은 각 주에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인 10명 중 7명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데에 반대하고, 59퍼센트는 모든 혹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낙태가 합법이어야 한다고 여긴다.

법원이 내릴 수 있는 판결은 여러 가지이고 복잡할 수도 있다. 각 주들이 더 조기에 낙태를 금지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낙태권은 헌법적 권리로 뇌둘 수도 있다. 낙태권을 아예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태아의 “생존 능력”이라는 기준을 폐기해서, 기존에는 허용되던 시점의 낙태를 제한할 수도 있다.

그러나 1차 변론이 열리자 보수 성향 연방대법관 6명(전체 연방대법관은 9명) 중 5명은 “생존 능력” 기준을 폐기하는 데에는 관심이 있지만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유지하는 데에는 관심이 거의 없음을 드러냈다.

그들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낙태권을 모조리 박탈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판사 배트는 입양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낙태가 필요하지 않다고 시사했다. “강요된 양육”의 부담을 입양으로 없애면 된다는 논리였다. 판사 토머스는 아예 낙태권이 헌법적 권리라는 것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진

미국 연방대법관들은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고 그 대통령이 속한 당의 당론에 따라 투표한다. 2016년 3월 당시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메릭 갈런드를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했다.

하지만 상원 법사위에서 다수를 차지한 공화당 의원들은 상원 인준 전에 필요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거부했다.

활동가들은 낙태권을 뒤집는 것이 공화당의 오랜 계획이었다고 말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여성의 권리를 공격하는 것에 맞선 항의가 여러 차례 분출했다.

2017년에는 대중운동의 강력한 잠재력이 드러났다. 당시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500만 명이 거리로 나와 ‘여성 행진’을 벌였다.

법원이 낙태권을 유지시키도록 강제하려면 이만한 규모나 더 큰 규모의 거리 운동이 벌어져야 한다. 낙태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도 싸워야 한다.

투쟁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여성들, 낙태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자기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박탈당할 것이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86호 / 번역 김준호

추천 책



[개정 증보판]
낙태, 여성이 선택할 권리
정진희·최미진 지음
노동자연대, 68쪽, 3,000원
구입 문의: 02-2271-2395
mail@workerssolidarity.org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낙태권을 헌법적으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위험에 있다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 위기·팬데믹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 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기후 위기 같은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 위기, 팬데믹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

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대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 (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역제를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체제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쳐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합시다.



드라마평

<콜린: 흑과 백의 인생>

인종차별에 도전한 스포츠 선수를 다룬 매력적인 드라마

김현진

넷플릭스 드라마 <콜린: 흑과 백의 인생>(이하 <콜린>)은 NFL(미국 프로 미식축구 리그)에서 저항의 아이콘이 된 콜린 캐퍼닉에 대한 다큐드라마다. 캐퍼닉 자신과 흑인 여성 영화감독 에이바 듀버네이가 함께 만들었다.

듀버네이는 <셀마>,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등 미국의 인종차별과 그에 맞선 저항을 다룬 영화·드라마를 제작해 왔다. 최근에는 넷플릭스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를 지지하기도 했다.

<콜린>의 6개 에피소드는 콜린의 어린 시절에 대한 내러티브 드라마를 중심으로 하면서, 더 넓은 맥락에서 인종차별의 역사를 연결하는 짧은 해설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콜린 캐퍼닉은 2016년 NFL 경기장에서 무릎을 꿇고 인종차별과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행동을 처음으로 시작해 리그에서 쫓겨났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수천 명의 어린 학생 선수들에게 비슷한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영감과 용기를 주었다. 그래서 트럼프는 “저 개새끼를 끌어내!”라 했다. 콜린은 흑백의 혼혈로 태어나 백인 가정에서 입양되고 백인 거주 지역에서 자랐다.

그러나 드라마 속 14세의 콜린(제이든 마이클 분)은 흑인 문화에 끌리고 일체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래서 농구 영웅 엘런 아이버슨처럼 골슬머리를 땡아 기르길 원한다. 하지만 백인 양부모는 그를 사랑해도 그를 둘러싼 인종차별 문제들에는 둔감하거나 공감하지 못한다.

2화에서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콜린은 자신보다 실력이 부족한 백인 학생이 쿼터백에 선발되는 데 분통을 터뜨린다.

미식축구 선수의 압도 다수가 흑인이다. 게다가 가난한 가정 출신도 많다. 그런데 포지션은 인종차별적이다.

모든 작전을 결정하고 지휘하는 쿼터백 포지션의 경우 흑인이 25퍼센트 밖에 되지 않는다. 1970년대에는 1퍼센트였다.

어린 콜린은 성장할수록 미묘하거나 사실은 전혀 미묘하지 않은 차별을 겪는다. 흑과 백의 경계는 흔들리고 커져



간다. 학교, 코치, 경기, 친구, 그리고 경찰과 더 넓은 세상에서.

어찌지 못하고 견뎌 내는 어린 자신을 바라보며 콜린 캐퍼닉이 말한다.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죠. 하지만 그때는 맞서 싸울 지식과 지혜, 언어가 없었어요. 저항할 수 없었어요. 방법을 몰랐으니까요.”

<콜린>은 NFL 신인 드래프트를 19세기 노예 경매 시장에 빗대기도 한다.

실제로 선수는 거의 흑인이고, 코치와 임원은 거의 백인이다. 스카우트 콤바인(대학 선수들이 프로팀에서 신체적 특성과 능력을 평가받는 곳)에서 선수들은 속옷 차림으로 서서 신체 부위를 측정당하고 사생활, 과거, 부모, 성생활에 대해 모든 걸 답해야 한다.

고등학교 4년과 대학교 4~5년을 무보수로 뛰면서(대학 스포츠는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수조 원짜리 거대 산업이다) 적자생존에 성공해야만 NFL 프로 무대의 좁디좁은 문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화려하고 보수가 높지만, 어떤 플레이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부상을 100퍼센트의 프로 무대에서 선수들의 평균 경력은 3년 6개월에 불과하다.

3화에서는 (미식축구 선수였고) 선구적인 흑인 정신과 의사인 체스터 피어스가 인종 간 “마이크로 어그레션”이라고 정의한 것, 즉 미세하지만 공격적인 인종차별에 대해 알 수 있다. 보는 내내 숨이 막힐 것 같다.

5화에는 1940년대 흑인 심리학자 부부가 고안한 “인형 테스트”가 나온다.

아이들에게 흑인과 백인 인형을 보여 주고 어떤 게 좋고 나쁜지, 예쁘고

못생겼는지, 어떤 인형처럼 되고 싶은지 물어본다.

아이들은 대부분 하얀 인형에 긍정적 특성을, 검은 인형에 부정적 특성을 부여했다.

그러다가 자신과 가장 닮은 인형을 물어 보면, 흑인 아이들은 위축되거나 화를 내거나 방을 뛰쳐나가기까지 했다.

이 테스트는 차별과 분리가 아동에게 끼치는 영향을 입증해, 미국 공립학교의 인종통합을 위한 대법원 판결에 기여했다.

그런데 21세기에도, 다른 나라에서도 테스트 결과는 비슷했다(2016년 이탈리아 영상을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체제는 고장 난 게 아니라 원래 [인종차별적으로] 의도된 것이다.’ <콜린>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급진적이다. 그러나 오로지 흑인 자신만이 흑인 해방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보는 흑인 민족주의적 색채도 있다.

하지만 <콜린>에서 소개되는 인물 중에는 다른 정치 전통에 선 이들도 있다.

예컨대 ‘할렘, 미뤄진 꿈’의 시인 랭스턴 휴스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미국 흑인 작가이자, 극좌파 정치 전통에 서 있었다. 그는 스페인 혁명에 가담했으며, 미국 남부의 흑인 린치를 규탄하는 시를 썼다.

특히 W.E.B 듀보이스는 미국에서 인종차별 반대 이론과 투쟁의 가장 중요한 선구자였고, 동시에 마르크스주의자였다. 그는 흑인과 백인 노동계급의 단결된 투쟁을 중시했다.

3화에서 콜린이 들고 나와 소개하는 듀보이스의 책 <미국의 검은 재건>의 메시지는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책 <인종차별과 자본주의>(책갈피)의 70~74쪽을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넷플릭스의 다른 7분짜리 단편 <경찰과 도둑>도 볼 만하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M) 운동의 배경, 그리고 인종주의로 억압받는 이들의 심정을 강렬하게 보여 준다.

미국 스포츠 선수들이 인종차별 문제에 항의한 운동을 다룬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과 스포츠 선수들의 저항도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기원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workerssolidarity.org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회비약정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회비약정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회비약정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윤석열, 노동이사제 공약

노동이사제로 일반 노동자들의 처지는 나아지지 않는다

김승주

윤석열이 15일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교사·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를 기업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이고,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들의 노조 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둘 모두 양대 노총의 요구사항이다.

지극히 온건한 요구들이지만, 그럼에도 최근까지의 강경 우파적 발언과 비교하면 좀 이례적이다.

윤석열은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속내를 살짝 드러냈다. “나는 사용자 편이 아니다. 표가 노동자 쪽에 더 많다.”

이날 윤석열은 그간 논란이 됐던 반노동 발언들(최저임금제 폐지 시사 등)을 수습하려는 듯, ‘이미 도입된 노동법제를 되돌리자고 주장한 적은 없다’고 변명했다.

많은 언론들이 이를 두고 윤석열이 “좌클릭”, “친노동 행보” 운운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노동이사제가 “정부나 노동의 힘에 의해 일방적으로 건인”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사용자 입장을 거스르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사용자 단체들과 국민 의힘은 노동이사제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윤석열은 같은 이유로 교사·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에 대해서도 적용 범위(전임자 수), 적용 시점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12월 15일 한국노총을 방문한 윤석열. 그러나 다음날은 SK 최태원을 만나 친기업 기조를 공언했다

결국 윤석열의 말은 진지한 개혁 약속으로 보기 힘들고, 선거판에 흔한 립 서비스에 가깝다. 그간 얼마나 우파 찬양 일색이었으면 이 정도를 가지고 “좌클릭” 운운하는 말들이 나올까?

노동이사제

우파 경제지와 재계는 윤석열의 노동이사제 찬성 발언이 “노조 구애에 골몰”하는 행태라며 신경질 났다. 국민의힘 나경원은 “노조 기득권 포퓰리즘”이라고, 홍준표는 “경영권 침해”라고 윤석열의 발언을 비난했다.

물론 사용자들은 특별한 압력에 떠밀리지 않는 이상 노동자가 감히 경영에 관여할 수 있다는 발상을 질색한다. 그러나 노동이사제 자체는 사실 사용자들에게 별 위협이 안 되는 제도다.

제도상 노동이사는 절대 소수이고

대주주나 재벌들의 경영권을 위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이사제는 이미 전국 10개 시도·기초지방자치단체 산하 82개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데, 이곳 기관장(사용자)들은 노동이사가 이사회 의사 결정을 지연시키거나 경영 효율성을 저하시킨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보고한다. (2020년 3월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 오히려 사측 관점에서 “순기능”을 지적하기도 한다.

노동이사제를 적극 주장해 온 <한겨레>나 민주당 박주민 의원(노동이사제 법안 발의)은 이런 연구들을 찬성 근거로 활용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 측이 경영 현안에 공동 책임을 지기 때문에 노사 갈등을 줄이고 기업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노동이사는 사용자를 제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영 협력에 이용되기 쉬운 것이다.

윤석열도 “원자력공사에 노동이사가 있었다면 [노동계가] 탈원전에 찬성했겠느냐”고 했다.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이용해서 노동자들을 사측 이해관계에 더 종속시키기를 바라는 것이다.

강한 반노동 기조

무엇보다 윤석열은 기업주들에게 비용 부담이 큰 주요 쟁점들에서 여전히 단호한 반노동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석열은 이렇게 말했다.

“최저임금이 180만 원, 200만 원이라고 하면 ‘나는 150만 원으로도 충분히 일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노동자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윤석열은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도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고 했었다.

그런 열악한 조건에서라도 일하겠다는 것이야말로 곤경에 몰린 노동자들의 처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사용자들은 경제 위기와 구직난을 이용해 노동자들을 경쟁시켜 이런 상황을 보편화하고 싶어 한다.

윤석열은 철저히 사용자 관점으로만 이런 문제에 접근한다.

윤석열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요구도 거절했다.

“사업자의 투자 의욕이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결국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다.]”

연금 개악 의사도 분명히 밝혔다. “결국 많이 걷고 적게 줘야 된다는 것 [이다.]”

윤석열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자 SK 회장인) 최태원을 만난 자리에서 대대적인 기업 규제 완화도 공언했다.

윤석열 NO!

요컨대 윤석열은 경제 위기 하에서 기업주와 지배계급의 이익을 지키고 계급 투쟁을 억누를 책임자임을 흔들림 없이 자처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은 민주당과 문재인에 대한 배신감이 큰 사람들을 모두 끌어들이고 싶어한다(‘반문재인 최대연합’). 전 민주당 대표인 김한길을 끌어들이고, 김한길의 페미니스트 신지에게 씨를 캄프로 영입한 게 그 사례다.

그러나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자리는 우파들이 꿰차고 있는 것이 보여 주듯이, 윤석열의 우파 본질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외연 확대는 그저 확실히 이기려는 수작일 뿐이다.

이재명이 지금 주류의 눈치를 보며 좌우로 오락가락 행보를 하지만, 이재명의 지지 기반은 민주당 주류와도 다르고, 윤석열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재명은 기반이나 지지층이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도 겹친다. 지배계급이 이재명에게 거리낌 없이 거부감을 드러내는 이유다.

그러므로 윤석열 당선과 우파 세력의 부활이 대중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다를 바 없다’며 단순히 치부할 일이 아닌 것이다.

대선 국면이 지리멸렬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윤석열을 찍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승소

투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권준모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대의원

12월 16일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사측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미지급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무려 9년 만에 승소했다. 최근 물가가 인상돼 노동자들의 삶이 더 팍팍해진 마당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대법원은 ‘신의칙’을 적용해 어려운 회사 사정을 생각해야 한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이유다. 신의칙은 노동자들더러 기업의 고충을 이해해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뜻으로, 기업이 어려울 때는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부당한 법 기준이다.

2심 판결이 나온 2016년은 조선업 위기가 가장 심각했던 때였다. 그러나 지금은 조선업이 회복돼 수주가 대폭 늘었다.



불법으로 떼먹은 임금 당장 내놔라 11월 1일 현대중공업 출근 선전전

노동자들은 이번 판결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제라도 사측은 체불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 사측이 우리의 임금을 6000억 원이나 떼먹었다고 하는데, 1인당 수천만 원에 이르는 큰돈이다.

사측은 떼먹은 임금을 주지 않으려

고 비싼 변호사 비용을 써 가며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그러는 사이에도 정몽준·정기선 총수 일가는 해마다 수백억 원씩 배당금을 받아 챙겼다. 사내유보금도 늘었다. 회사는 돈이 없어서 안 준 게 아니었고, 소송 결과가 미칠 파장과 비용 상승을 우려했던 것이다.

경계

소송이 진행된 초기인 2013년, 사측은 대법원 판결을 따르기로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했다. 체불임금 지급이 지연된 것에 해당하는 법정 이자도 지급하기로 했다(이 돈도 꽤 큰 액수다).

사측은 2009년 이후 정년퇴직자에게도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었다. 그런데 9년이나 소송이 질질 끌리면서, 그 사이에 사망한 노동자들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다고 한다. 가족들이 받을 수도 있을 텐데, 너무 씁쓸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 사측은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기는커녕 “당사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며 파기환송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사측만이 아니라 재계 전체가 적극 나서서,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승소로 노동자들의 기대가

크지만, 판결만 바라보고 무조건 희망을 가지기에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사용자들이 법원 판결조차 무시하는 경우도 너무 많았다.

예를 들어, 2019년 기아차 노동자들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이겼지만, 잘못된 노사 합의로 체불임금의 절반만 받았다. 현대차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소송에서 이겼지만, 사측은 끝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신규채용 방식으로 절충했다.

사측은 어떻게든 부담을 회피하려 할 것이고, 다른 사용자들이 그랬듯이 지급액을 깎는 방식으로 노조에 타협을 압박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체불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일감이 늘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해 투쟁한다면, 효과적으로 사측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

